

< 차 례 >

【 고용분야 】

- 1.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안내 1
-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안 2
- 3.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3
- 4. 고용허가제(E-9) 신청·접수 4

【 감독분야 】

- 5.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5

【 안전분야 】

- 6. 안전조치 소홀 중대 인명피해 구속 사례 9
- 7. '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10
- 8. 소규모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11
- 9.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12
- 10.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 13

【 기타자료 】

- [참고]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2025.12월) 14



2026년 2월

최신
노동뉴스

노무법인 의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 053-719-2408

🏠 053-719-0019

1.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안내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급

○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 총 69억원을 확보, 1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전환을 망설여온 30인 미만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를 확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

○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으로서 6개월 이상 근
 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기업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사업 참여를
 승인받고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이행하면 지원

*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

○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
 시 기본 40만원이 지급되며,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원

*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범위 내 지급 가능(5인 이상~10인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

○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안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지원내용

구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유급	(우선지원)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 (대 규 모)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1/2* *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2/3	피보험자별 1일 68,100원 (연 180일)
무급	피보험자별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	

□ 요건별 주요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
유급	지원요건 (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지원금 신청기한 (휴업) 고용유지조치 실시 다음 달 말일 (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무급	실시인원 (휴업) 19명 이하 : 50% 이상 20~99명 : 10명 이상 100~999명 : 10% 이상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휴직) 99명 이하 : 10명 이상 100~999명 : 10% 이상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19명 이하 : 50% 이상 20~99명 : 10명 이상 100~999명 : 10% 이상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사전요건 (휴업)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필 요 (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피보험자 20% 이상) 실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필 요
	실시기간 피보험자별로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별로 1개월 이상 실시
공통	매출액 감소요건 기준달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무급은 20% 이상 감소) 추세	기준달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무급은 20% 이상 감소) 추세

3.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

- 기존 I·II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7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힘

○ '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

○ 지원내용 비교

구분		'25년		'26년	
유형		I유형	II유형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 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 기업	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기업 취업 청년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 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지원 수준	기업 청년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월)	-	2년간 최대 480만원
		⇒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월)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역별 차등 지원)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4. 고용허가제(E-9) 신청·접수

- 2026년 총 5회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 1. 26.부터 2. 10.까지 1회차 신청·접수

○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 또한,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8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4~3.10.,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11.~3.17.에 진행

외국인노동자와 일하고 싶은 사업장이라면?

2026년 총 5번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회차 1.26.(월)~2.10.(화) ②회차 4.20.(월)~5.6.(수) ③회차 7.6.(월)~7.17.(금)
 ④회차 9.14.(월)~9.29.(화) ⑤회차 11.23.(월)~11.27.(금)

✓ 고용허가제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5.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 모든 물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및 공공부문 등에 역량 집중
- 국민의 요구, 새로운 노동·안전 이슈 등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선제적 대응

- 고용노동부는 1.22.(목),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협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
 -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
-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
-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

[① 노동 분야]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①임금체불, ②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③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

*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 감독 등을 통해 추가 체불 여부 확인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확산

둘째,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연 400개소).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제보 사업장 감독은 타 감독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익명 제보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 85.8% vs 일반 감독 법 위반율 57%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

한편,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노무 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

[② 산업안전 분야]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

6. 안전조치 소홀 중대 인명피해 구속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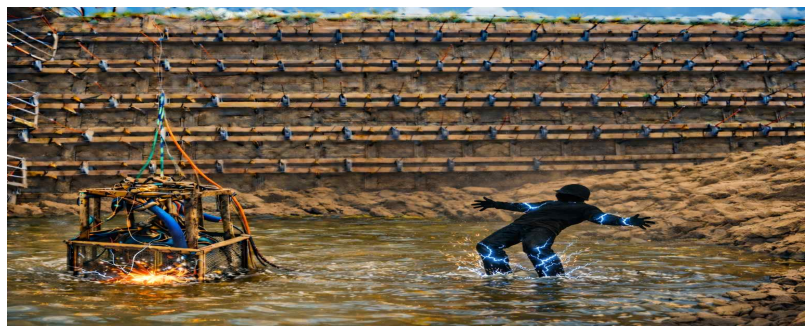
○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감전사고)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미얀마 국적) 노동자 감전사고(부상 1)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 원청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속영장은 법원 "기각"

-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과정에서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되어 감전으로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 누설전류: 전기설비·기기 등의 절연이 열화·손상되거나 습기·수분 등에 노출될 경우, 전류가 정상적인 회로를 벗어나 기기 외함, 금속 부분 등으로 새어 흐르는 전류



❖ (재해 상황)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누설전류에 감전

- 해당 원·하청 건설사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에 대해 입수수색을 실시, 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결과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감전 위험이 높아 안전상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선 절연 조치 등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7. '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품목 최대 90%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요

- 내용 :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품목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 *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3개 분야
- 대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 50억 미만 건설현장 등(사업별 상이)
- 지원 : 사고 예방품목 구매 시 소요비용의 최대 90% 지원(사업별 상이)

○ 올해는 작년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5,3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 특히,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등) 사업장의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구매한 품목은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

<'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내용>

사업명	지원품목(분야)	지원대상	사업예산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정개선설비 일체	50인 미만 제조업 등	3,320억원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설비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534억원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272억원
	스마트 안전장비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370억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떨어짐·부딪힘·끼임 사고예방설비	1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등	429억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50인 미만 사업장	128억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50인 미만 사업장	280억원

* (자격 및 내용) 누리집(portal.kosha.or.kr) 내 사업별 공지사항 확인

* (문의) 안전동행지원사업(☎1644-4555),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1544-3088),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1644-8835)

8. 소규모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 1월 6일부터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접수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월 6일(화)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

-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

- * (운영비 지원대상) ▲사업주 협·단체, 조합 등
- * (운영비 지원수준)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대 월 271만원 한도
- * (운영비 지원비율) ▲정부: 80% + 협·단체 20%,

-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동안전관리자가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 평가 및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개선·제거 등을 지원

■ [사례 1] “비계, 전기안전 등 작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감전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 활동 계획을 세우고 관리한 결과, 93개 회원사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시멘트업종 협·단체>

■ [사례 2] “조선소 고소작업 시 개구부 추락과 작업장 내에 야적된 중량물 부딪힘, 용접 공간의 화재 등 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를 지원한 결과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선업종 공동안전관리자>

■ [사례 3] “기계 제조업체 압축 공정에서 발생하는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방법 개선을 지원하였더니 끼임 위험이 줄었고, 현장 불편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니 신뢰가 커졌습니다.” <기계제조업종 공동안전관리자>

○ '24년부터 '25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계속 추진, 올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를 '25년 250만원에서 '26년 27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9.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 2.2.(월)~2.6.(금)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26.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

* 「집중점검주간」은 매월 1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

-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어 한파를 현장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겨울철 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

- 우선,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불시·집중 점검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❹작업시간대 조정, ❺119 신고

○ 또한, 지방정부,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의 적극적인 안내 및 현장 지도 등 예방활동을 병행

- 아울러, 설 명절(2.14.~2.18.) 전·후로 작업 물량 증가와 작업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집중 지도한다. 또한, 연휴 중 산재 위험상황 발생 시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및 「안전일터 신고센터(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형산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

10.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

○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수, 3월 11일 선정결과 발표 예정



고용노동부 X 안전보건공단

2026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

참가자격

사업주, 노동자, 안전보건관계자, 청소년 등 전 국민 누구나

진행절차

공모전 접수

1월 19일~2월 6일 (3주간)

공모전 심사

2월 9일~3월 10일

최종 발표·시상

3월 11일

* 선정 결과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 또는 이메일, 전화로 안내합니다. 별도 통보 없습니다.

시상규모

분야	구분	선정	시상내역
안전 메시지	최우수상	1명	LG 스탠바이미
	우수상	4명	갤럭시 워치8
	참가상	50명	커피ギフト券

접수기간

1월 19일(월) 09:00 ~ 2월 6일(금) 18:00

공모주제

노동안전 감수성을 제고하는 메시지 또는 안전 수칙을 제시하는 메시지 (이미 설명 포함)

제출방법

우측 QR코드 또는 하단 링크
공모전 폼을 통해 온라인 제출
참여 링크 | naver.me/F2nba08o



문의

이메일 | ahnone@kosha.or.kr
전화번호 | 052-703-0428

참 고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5.12월)

